

한국사회의 부패유착과 구조

Corruption of Structure and Adhesion in Korean Society

김 택 (Kim, Taek) *

I. 서 론

최근 한국경제추락의 근저에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기업의 정경유착적 경영과 관치금융의 폐해, 고비용의 정치구조화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관치금융과 각종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금융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관료의 재량행위, 복잡한 행정의 절차와 제도, 정부정책의 규제 일변도로 인해 필연적으로 각종 뇌물과 급행료, 유착성 로비자금을 낳게 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부패문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악이었고 경제운영에 있어서 윤활유로 여겨졌다. 또한 무엇인가 바쳐야 한다는 사회의식과 관행 이른바 미풍양속으로 합리화되기도 하는 백색부패(white corruption)화 되었다. 그래서 부패는 정치인, 관료, 사회 모든 계층에 이르기까지 풍토병처럼 만연되었다.

자본주의는 이윤창출과 시장경제원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기업은 비용과 수익이라는 회계원리의 기초에서 경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뇌물 급행료 부정한 로비성 자금 등이 기업경영의 주요변수가 될 때 부패는 경제발전의 강한 저지요인이요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다.

유착부패의 전형이라할 수 있는 한보부도사건을 볼 때 이것이 '기업이 과다한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라고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정·경·관 그리고 일부 언론이 결탁한 구조적 검은커넥션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문민정부 하에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무너진 원인의 하나에는 그동안의 정경유착성 경영으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탓으로 돌릴

* 강원대 및 한림대 강사(行·博)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착부패의 제국을 쌓아 나가게 된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출범초 국정 개혁의 제1의 과제로 내세웠고 그간 강력한 사정과 부패청산을 시도했음에도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정경유착이 근절되기에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제까지 부패로 국력을 허비해야만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정경유착적 구조와 실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유착구조 근절방안과 부패감시기능으로서 언론 통제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한국사회의 부패유착구조

1. 政・經 腐敗의 癥着

해방 이후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정경유착 관계가 술한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이들이 유발한 각종의 비리는 건전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질서를 교란케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¹⁾ 단적인 실례로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와 중석불사건,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와 국방부 原綿 사건, 1960년의 3·15 부정선거와 산업금융채권 및 농업 금융채권, 1963년 선거와 4대 의혹사건, 三粉 폭리사건 등이 여당의 선거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²⁾ 우리나라 3공화국 시기부터 노태우 정권까지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은 상이하다. 3공화국 시기는 정당이 중심이 되었지만 유신 이후 제5공화국 시기에는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정치자금을 조달하였다. 3공화국 당시 정치자금 조달방법을 보면 정치권력과 재벌 간에 이권을 매개로 내밀적으로 수수되는 방법과 직접 정치권력의 조작에 의한 방법이 있다.³⁾ 먼저 이권을 중심으로 수수되는 방법을 살펴보면, 중앙정보부나 경제기획원이 정보나 자료 그리고 개별업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로 특혜금융, 차관, 대규모 공사, 기타 특혜사업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흥정하거나 할당한다. 정치 자금액은 당해 기업체와 정부관계,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실력자의 관여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귀속재산 불하, 정부 보유달러 불하, 탈세의 경우에는 10~30%, 은행융자 및 차관지불보증에는 5%, 정부토건사업에는 4%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⁴⁾ 대일청구권 자금사용에는 사용자의 정치자금 신고제로 그 승인여부를 결

1)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89), p. 320.

2) 정용길, “새정치 방식과 정치 비용”, 「정경문화」, 제188호, 1980, p. 180.

3) 안병만, 상계서, pp. 343~345.

4) 김 영, 「당인(黨人)」, (서울 : 백미사, 1982), p. 322.

정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속도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지하철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많은 커미션이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는데 고속도로,공단조성에는 공사발주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건설대금의 5%가 현금되고⁵⁾, 서울 지하철 1호 공사에는 당초 일본업자와 8%로 목계되었으나 나중에 4%로 낙착되어 150만 달러가 정치자금에 현금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⁶⁾

제5공화국 때의 정치자금 모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으로 한정하여 양성화 시키고 음성적인 모금은 청와대로 집중시켰다.⁷⁾ 모금은 대통령과 대기업자와의 개별면담이나 대통령과 재벌총수와의 분기별 청와대 정례모임을 통한 각종 성금형식을 그 방법으로 택하였는데, 새마을 성금이 대표적인 실례이다.⁸⁾ 기업들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먼저 청와대에 내인가를 받은 후 주무관련 부처의 관료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연히 대통령 주변 실력자들을 찾게 되었고 나아가 권력형 부의 축재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5공화국 친인척 비리'가 초래되었다.⁹⁾

정치자금은 규모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조달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조작에 의하거나 정치권력이 재벌에게 이권을 주고 반대급부로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치발전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6공화국 들어 노태우씨는 5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국책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인 허가, 세무규제, 금융지원 등 각종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챙겨왔는데 이것은 정경유착의 전형적 표본이라 할 수 있다. 5공의 전두환씨, 6공의 노태우씨가 거두어 들인 돈은 각각 9,500억원, 5,000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었음이 그들이 구속되면서 밝혀졌다. 말이 정치자금이다, 비자금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거액의 금품수수는 부정한 뇌물이라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이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갖가지 부정부패를 초래하여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정부불신, 나아가서는 국민의 단합을 저해하며 민주정치 발전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軍・經 腐敗의 癥着

1) 軍・經 유대로 인한 軍・經 유착

5·16 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정치적 前面에 직접 등장한 군부는 지난 30년간 한국은 類似 民軍 복합체제의 軍部統治를 해왔다.¹⁰⁾ 5·16의 주도세력은 軍政 통치기간을 거치면서 공화당을 창당

5) 오경환, "떡 만지면 떡고물 묻는 법 : 부정부패 30년의 전례적", 「정경문화」, 1984. 9, p. 275.

6) 이상우, "돈과 정치", 「월간조선」, 1984. 8, p. 155.

7) 조갑제, "전두환의 인맥과 금맥", 「월간조선」, 1988. 5, p. 218.

8) 안병만, 전계서, p. 346.

9) 안병만, 전계서, p. 346.

10) 한용원,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軍의 역할", 「한국정치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편, 법문사, 1989, pp. 117~123.

하고 군부출신 엘리트들은 대폭적으로 국가관료기구에 충원하는 한편 신진기술관료들을 충원함으로써 유사 민간화된 군부정권을 성립시켰다. 민군 연립체제에서 정치지배력은 군출신 엘리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¹⁾

박정희 政權은 국가기구의 확대 및 국가관료의 팽창과 국가재정의 증대를 통해 국가능력을 팽창시켰으며, 대규모의 외국차관의 도입으로 市民사회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사회·경제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평가절하와金利인상을 통해 수입대체 산업구조의 기반을 붕괴시켜 수출산업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실 4·19 후 자본가들은 부정축재로 몰려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5·16후 다시 권력 해바라기성을 발휘,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경제계획에 적극 참여하였고 그후 산업화 과정에서 특히 外延의인 경제체제로의 정책전환에 편승하여 자본축적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마디로 독점자본세력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많은 정치적 희생을 무릅쓰고 새로운 외국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험난한 공업화 과정의 첫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것은 政府가 주무른 外資에 기생한 산업자본으로서의 재벌이 본격적인 자본축적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¹³⁾

따라서 박정권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연합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民衆부문을 외면하고, 기업인을 동반자로 선택한 이래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의 기반은 軍部 엘리트 및 기술관료와 재벌의 연합체가 되어왔다.¹⁴⁾

한국의 군부는 권력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재벌과 제휴, 관료 재벌과 함께 지배 엘리트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정경유착이 심화되어 富의 편재는 물론 권력형 부조리가 야기됨으로써 우리사회에 층체적 부패구조를 형성케 하였다.

2) 군납과 軍·經 유착

6·25 전쟁을 계기로 군부세력이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국가정책이 군 작전에 우선권을 주었고 군대의 발언권이 늘어났으며 국방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이와같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수품 분야는 우선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므로 어느 때나 군납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쟁 직후의 50년대 우리 경제는 이렇다 할 발전계획을 갖지 못하였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비능률적이었다. 따라서 자본축적은 기대할 수 없었고 수출규모나 경제규모는 영세하기 짝이 없었으며 공무원 세력은 부정부패

11) ae - Souk Sohn, "Political Dominance and Political Failure", in Henry Bienen (ed.) The Military Intervene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p. 111.

12) 박종철, "국의 산업화 정책과 국가의 역할 1948~1972 : 공화국과 3공화국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7) 참조, 한용원 상계논문 재인용

13) 강 민, "한국관료적 권위주의의 구조적 특성", 「계간 경향」, 봄호, 1988, p. 25.

14) 한용원, 상계논문, pp. 125~127.

가 만연된 상태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성장의 지름길은 軍納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특히 H그룹의 경우 1950년대 말 미군 군수품 수송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되어 1960년대 월남전의 와중에서 7백 80만 달러어치 물자수송 계약을 美軍과 체결하여 일약 수송재벌로 등장하였음은 대표적인 예이다.¹⁶⁾ 이와같이 군납은 대규모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되므로 일면은 각종 收賂사건, 이권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다른 일면으로는 재벌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6년 7월에 발생한 안보를 망각한 軍·經 합작사건은 모든 국민의 우려를 낳게 한 대표적 케이스였다.¹⁷⁾

S항공 간부들이 국방부 현역장교 7명과 짜고 한국군 무기체계 계획 등에 관한 극비문서를 빼내 무기수주에 이용했다. 장교들의 전역 후 취업을 미끼로 무기상직원과 놀아난 이 사건은 비밀을 취급하는 우리군 장교들의 부패의식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었다.

국방부 내에서도 관련분야의 핵심인사들만이 취급하게 돼있는 2급 비밀이 7건이나 유출되었고, 이밖에 3급비밀과 대외비 및 기타 군관계 서류를 합치면 유출문건이 1백 20여건에 이른다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 발표내용이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양호 前 국방 장관을 둘러싼 비리의혹 가운데 실제로 드러난 것이 무기중개상과 방위산업체들의 로비활동이다. 무기중개상이나 방위산업체들이 국방부에 무기구매와 관련된 로비를 하는 것은 막대한 커미션 미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무기시장 규모는 연간 2조~3조 원 규모, 무기중개상들은 갖가지 연줄을 동원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따내려 한다. 무기중개는 총 거래액수의 1~5%, 보통 3~5%가 커미션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D 중공업이 '경전투기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도와 달라'고 이양호 前 국방장관에게 1억 5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은 국방의 총책임자가 무기납품과 관련해 재벌기업, 무기중개상과 검은 거래를 해 온 軍·經 유착의 한 좋은 실례라고 볼 수 있다.

3. 政·言 및 經·言 腐敗의 癥瘕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언론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속성상 갈등과 긴장이 없을 수 없다.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은 항상 두 영역간의 갈등과 긴장을 낳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상대방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

15) 안병만, 전계서, pp. 327~328.

16) 조선일보 경제부, 「재벌 25사」, (서울 : 동광출판사, 1983), pp. 152~155.

17) 조선일보, 1996년 7월 24일.

18) 동아일보, 1996년 10월 22일.

체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미묘한 共生 또는 공조관계를 유지한다.¹⁹⁾ 한국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문서상의 자유로 한정되어 있었고 정부권력도 초법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은 기껏해야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비판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강제된 동조세력으로 안주했던 시절도 있었고 5공 시절에는 언론의 역할은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했었다. 5공이 무너진 이후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또는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선전도구’였다는 자체비판이 있었을 정도로 언론은 도구적인 역할을 해 왔다.²⁰⁾ 정권과 언론의 共生관계는 權·言 복합체라고 표현된다. 권력은 언론기업에 특혜를 주어 언론사가 수익성 높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언론기업은 그 반대급부로 보도와 논평에 있어서 권력의 지시나 지침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권력에 봉사한다. 권력은 협조적인 간부 언론인을 국회의원에 발탁하거나 정부의 요직에 기용하기도 한다.²¹⁾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정치권력과 言論은 공생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지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공생, 유착관계는 오늘날 국민 다수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정부에 대한 언론개혁으로 작용하는 경우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패척결을 실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 언론을 동반자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발본색원의 성격을 띤 정도까지 언론부패척결을 실시하지는 못할 것이다.²²⁾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言論은 경영진의 이윤추구성향과 편집진의 사회적 가치의 分析을 위한 전문성이 갈등과 이질성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언론은 하나로 규합되어 對日本 투쟁이나 대정부 견제 등의 이유로 동일한 입장을 취해 온 특유의 전통도 지니고 있다.²³⁾ 그러나 유신 이후 언론경영의 정경유착과 언론경영층이나 경력언론인의 정치 전향성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서 일반 독자들에게 언론 경영층이나 편집진용의 신뢰가 떨어지는 추세였다. 언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프레드 시버트에 의하면 조정기관으로서의 政府, 조성기관으로서의 政府, 그리고 참여기관으로서의 政府로 나타난다.

調整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언론활동을 침해함이 없이 언론활동의 조건을 규정하여 언론의 공공성을 제고한다. 造成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사회 公器로서의 언론기관에 대해 각종 특혜, 감세, 면세, 용지수입상의 편이, 교통, 체신요금의 할인, 시설이용의 편이, 그리고 재정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의 기능은 실체에 있어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언론을 기업화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오늘날 언론재벌, 상업주의

19) 이민웅, “정부와 언론의 관계”,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편, 1993, pp. 150~155.

20) 방정배, “한국언론개혁론”, 나남, 1991, pp. 246~249. 21) 이효성, “정치언론”, 『이론과 실천』, 1989, pp. 146.

22) 안광식, “언론정책분과 논문에 대한 논평”,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 pp. 176~191.

23) 원우현, “한국언론과 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사회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 고시원, 1988, pp. 516~517.

24) 유근일, “민주화와 공공행정 언론관계”, 『민주사회 성숙을 위한 행정』, 고시원, 1988, pp. 532~533.

적 재벌의 형성을 정부가 유도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그랬었고 여기서 政·淸의 유착 經·淸의 유착이 강화된다. 그리고 한국의 재벌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언론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재벌소유의 언론사들, 대기업체들의 민간방송 진출로 언론은 이제 환경감시기능보다는 종속적 발전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장치로서 그리고 그러한 발전이 필요로 하는 독자들의 비정치화를 위한 허위의식의 전파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기업으로서의 私의인 이윤추구의 특혜를 보장 받는다.²⁵⁾

4. 行政官僚腐敗와 政·經·軍·淸 腐敗의 癥着

우리는 위에서 政·經·軍·淸의 유착관계를 두가지씩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들 유착관계를 종합화 해보고 이들 유착과 행정관료와의 유착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한국 군부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난 30년간 정치일선에 직접 등장하여 類似 民間化된 軍部統治를 해 왔다.²⁶⁾

군부통치 기간 동안 한국의 지배 엘리트 내에서 軍 출신의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주요 요직에 군부출신 엘리트가 국가의 핵을 이루고 다른 엘리트 집단을 통합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과거 23년 제3, 4, 5공화국 기간에 정치가로서 의회에 참여한 軍 출신 엘리트의 평균 비율은 전체 의원의 15.8%였다.²⁷⁾

3공화국에서 5공화국 기간 동안 장관직의 3분의 1을 군부엘리트가 차지했다. 이것은 군사쿠데타(1961년) 이후 행정부와 국회에서 군출신들이 핵심주체 세력으로 지배해온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일이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지난날의 우리의 권력구조가 군부세력과 다른 정치세력의 복합체(政·軍유착)였음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政·軍 복합체는 經濟界에도 연장된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있어 경제발전은 제1공화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政權이 추구한 지상과제였고 경제발전의 추구과정에서 기업가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았다.²⁸⁾ 이러한 측면에서 군부 권위주의의 체제는 기업에 각종 특혜(금융, 조세 해외차관, 공장부지 등)를 주었고 기업은 반대급부로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모순을 낳게 하였다.

한국의 자본가 계급은 전체 인구의 1% 정도를 구성하는 소수 계급이다. 이들은 국가 관리자들이 수립한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력하고 정권 담당자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25) 유근일, 상계논문, p. 532.

26) 유사민간화된 군부정권은 정당을 새로이 창당하고 관료를 충원시켜 군부·관료 연합체제를 형성한 정권을 말함.

27) 한용원,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군의 역할”, 「한국정치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편, 법문사, 1988, p. 135.

28) 이정복,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유신체제”,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한배호 외 18인 공저, 법문사, 1994, p. 147.

그들의 정권유지에 공헌하였다. 자본가들은 그들 자신의 사업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특혜에 의존했었고, 또 이러한 특혜에 대한 기업가들의 수요는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특혜의 공급량을 항상 초과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관리자들의 요구와 희망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²⁹⁾ 더욱더 유착적 관계를 形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政·經·軍의 유착은 물론 言論에까지 연장된다.

그간 한국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환경감시 기능이나 Watchdog기능 보다는 권위주의적 군부통치세력이나 자본가 세력과의 유착과 긴밀한 유지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부패를 일소하고 참다운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는 언론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나 그것은 곧 국가권력에 대한 언론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치권력은 언론의 감시적인 비판을 달갑게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³⁰⁾ 체제지배세력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선전도구가 되도록 압력과 회유,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왔다. 권위주의적 억압체제인 정치권력을 옹호하고, 없는 正當性을 있는 양 강변하는 선전 홍보의 도구로 전락하도록 보도지침이나 法律을 제정하여 압박을 했다. 압력에 대하여 회유는 군부정권들이 국회나 정부의 요직에 언론인들을 임명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이 경력 언론의 정치 전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 경영층도 압력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권력에 대한 우호현상을 나타냈다. 이리하여 政·經·軍·言의 유착은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政·經·軍·言의 유착과 행정관료의 유착관계를 고찰할 차례이다. 행정관료는 정경유착, 군경유착, 정언유착 등의 각 유착에 있어서 고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政과 經의 부패가 유착하려면 여기에 관료부패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된다. 經의 비자금에 政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그 반대급부로서의 혜택조처는 행정관료의 손에 의해서 행해진다. 때문에 三者가 유착되지 않고서는 政·經 유착은 불가능해진다. 軍·經 유착도 마찬가지다.

지난날 軍은 政의 핵심이었으니 軍經유착은 즉 정경유착이다. 따라서 軍經 유착의 고리도 행정관료라고 보아야 한다. 政言 유착에 있어서도 역시 관료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보아올 때 政·經·軍·言의 유착은 政·經·軍·言·官의 유착으로 확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 유착에 있어서 官은 주축이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행정관료의 역할이 없이는 모든 유착구조가 제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행정관료들은 특히 朴正熙 정권 때부터 여러 면에서 상당히 주도성을 지니게 되었다. 朴정권은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의 주역을 행정관료들에게 맡겼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기본 노선만 제외한 모든 大小 정책

29) 이정복, 상계서, p. 151.

30) 이준일,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 「한국정치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편, (서울 : 법문사, 1989), pp. 142~143.

31) 유일상, “언론기능의 역동성”, 「사상과 경향」, (경향신문사, 1987년, 겨울호), pp. 92~93.

들은 다 관료들이 결정했다. 그리고 모든 자원도 다 관료들이 장악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군사 권위주의 정치와의 밀월은 장기간 계속 되었으며 이것은 政·官유착을 공고히 했고 또 軍과 經의 유착으로 확대되었으며 言論에 까지 연장되었던 것이다.

Ⅲ. 한국사회의 부패실태

1. 政治腐敗의 實態

정치부패는 오늘날 주로 개도국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패이다. 정치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을 놓고 잡은 세력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못잡은 세력은 그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여기에서 정치부패가 나타난다. 야당측에서도 부패가 나타나지만 특히 권력을 잡은 여당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다. 야당을 탄압하고 자기정당을 확대 강화하며, 국민을 조직 동원하고 선거부정을 자행한다.

여기에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든다. 특히 부정한 선거를 치루는데 드는 돈은 그 한계를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이 많은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지난날 선관위에 기탁된 자금의 배당이나 국고 보조금은 각 당에 쓰는 정치자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치개혁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고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 되었지만 지난날에는 적어도 그랬었다.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개인의 정치자금은 물론 당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정치부패의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특히 무엇보다도 노태우씨는 퇴임하자마자 자신의 재임기간중(91년) 터졌던 엄청난 비리사건(수서사건)의 장본인을 통해 가명계좌를 변칙 실명전환, 금융실명제를 피하면서 일부 비자금의 사실상 관리를 맡겼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한 노씨는 각종 금융자산 부동산 소유에 그치지 않고, 약점이 많고 자금사정도 좋지않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私債놀이」를 했다는³²⁾ 점에서 그의 도덕성이 또한번 문제가 되고있다.

32) 조선일보, 95년 10월 31일, 11월 7일에 실려있는 공보처여론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 상당수는 盧泰愚씨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취임초부터 기업의 돈을 받지 않는다는 金泳三대통령의 약속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공보처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조사는 공보처가 여론조사전문기구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나 31일부터 2일까지 20세이상 일반인 1천 53명을 상대로 한 전화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수사와 관련 「매우 철저하다」(4.6%)와 「철저한 편이다」(34%)라는 응답보다 「철저하지 못한 편이다」(45.1%), 「전혀 철저하지 않다」(5.8%)는 응답이 더높게 나왔다. 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않겠다는 金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매우 잘지킨다」(5.1%)와 「지키고 있

국회의원들의 부정은 크게 보아 利權개입, 특정기업 또는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고 청탁또는 알선하는 행위, 인사청탁, 외유, 입원, 경조사 등을 미끼로 노골적으로 자금을 챙기는 행위, 예산심의권을 악용해 자금을 챙기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로비를 받고 청탁·알선하는 행위이다.³³⁾

국정감사를 둘러싼 일부의원들의 적극적인 로비 유도 방식도 천태만상이지만 크게보아 다음과 같이 몇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도직입방식은 문자 그대로 이권을 미끼로 하여 그 대가로 직접 요구하는 형태로써 박재규의원 사건이 대표적 예이다.³⁴⁾ 스리쿠션방식은 이보다는 한 차원높은 세련된 방식으로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때 검은돈이 나올 만한 항목을 요구자료 목록에 포함시켜 관계공무원이나 업계가 慊을 잡고 사전에 알아서 손쓰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³⁵⁾ 이때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는 국감정책질의에 앞서 보도진에게 배포하는 질의서에 해당 사항을 슬쩍 포함시켜 겁을 주기도 하고 자신의 발언시 당초 질의요지에 없던 사안을 가습적으로 치고 나오는 이른바 틀니식 수법이 보조수법으로 동원되기도했다. 이에 반해 무임승차식은 한 의원이 이미 훑고 지나간 사안을 며칠 뒤 심지어는 다음 회기에 다시 물고 늘어져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방식으로 일부의원 사이에서는 가장 치사하고 졸렬한 방식으로 치부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재계, 이익단체간에 이뤄지는 각종로비와 逆로비는 돈과 利權, 약점찌르기 정국상황 등이 다양하게 얹히고 설켜 돌아간다는 것이다. 특정업체나 이익단체의 로비를 받고 뛰는 경우는 반대급부를 노린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직접·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³⁶⁾ 이밖에 의원들은 은행용자를

주 32)에서 계속

있는 편」(33.9%)이라는 응답과 「지키지 못하는 편」(30.7%), 「전혀 지키지 못한다」(7.3%)는 응답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와함께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는 ●정치인 의식개혁(12.5%) ●정경유착 척결(5.7%) ●비리에 대한 철저수사(5.1%) ●지속적이 제도개혁(4.7%) ●정치자금 양성화(3.7%) ●기타(20.6%)순으로 꼽았다.

33) “의원비리 그유행과 실태”, 「월간중앙」, 1991년도 3월호.

34) 박의원의 前비서관 全大日씨의 고발로 알려진 防除협회로비사건은 농약관리법을 개정, 등록제로 묶어있던 방제사업을 허가제로 바꾸어 기존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대신 방제협회로부터 2억1천만원의 받았다는 것과 大田 신생정신병원 측의 부탁을 받고 농협에 압력을 넣어 10억원을 대출토록했으며 그 댓가로 1천5백만원을 챙겼다는것을 말한다. 월간중앙 91년 3월호 참조.

35) 여천앞바다에서 씨프린스호의 좌초사건이 일어나자 LG그룹의 호유해운측은 여천군 관내기관장과 국민회의 신순범의원에게 뇌물로 무마하려했다. 신의원은 돈을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검찰이 언론보도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자 1천만원 수뢰를 시인했다. 조선일보 96년 2월 25일 참조.

36) 1990년 6월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등포역사 상가특혜분야件이 대표적인 케이스. 롯데건설이 37개 상가사무실을 일반에 분양한 영등포역사 상가는 분양과정에 국회의원들이 개입해 일부는 본인 또는 부인의 명의로 분양받았다. 특히 분양을 받았다고 거명된 11명의 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구부인했는데 당시 특명사정반의 조사결과 일부는 본인 또는 부인이름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6명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의 프데미움을 받고 전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간중앙 1991년 3월호 참조.

알선한다거나 인사청탁을 위해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유 경조사 병원입원 도자기 등의 수단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³⁷⁾

다음으로 지방의원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4년동안 169명의 지방의원들이 각종 범죄로 구속되었다. 광역의원 866명과 기초의원 4,304명 등 총 5,170명 가운데 564명이 각종 비리와 관련돼 형사입건 됐다.³⁸⁾ 형사입건된 부패유형도 뇌물수수 사기 폭력 횡령 간통 강제추행 및 치상에서부터 수질환경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위반 등에 이르기까지 45개 죄목이 망라돼 있다.³⁹⁾

2. 經濟腐敗의 實態

‘독재체제는 부정부패를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점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예외는 아니다.⁴⁰⁾ 5·16 군사정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이 1962년의 증권과동이었다고 한다면 1979년 12·12 사태 이후의 일련의 권력투쟁 과정은 ‘장영자 사건’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생하는 권력형 부정과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영자 사건은 한마디로 일부 기업인, 금융인, 사채업자들이 구시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제금융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권력형 경제부패라고 볼 수 있다. 그 뒤 명성 김철호 사건, 영동개발진흥사건 등 경제 부패들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권력(政)과 기업인(經)간의 유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공화국 당시 권력과 기업의 결탁이 바로 부실기업 정리라고 할 수 있다.引受기업은 정부의 특혜지원으로 자체 자금의 부담 없이도 부실기업을 인수하였고, 이 인수기업은 정치자금을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많이 바쳤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86년 국제그룹 계열사 6개를 引受한 한일합섬은 그 해에 단위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46억원이 넘는 액수를 기부하였으며, 1984년 경남기업을 위탁·경영하다가 1986년에 정식으로 인수한 (주) 대우도 인수 당시의 기부금이

37) 지난 1991년 2월 구속된 국회상공위 소속의 이재근, 이돈만(평민당) 박진구(민자) 세의원의 뇌물 외유사건이 있다. 이들은 무역협회로부터 2만달러, 한국자동차 공업협회로부터 5만7천달러 등 총 9만3천달러를 지원받아 외유한 사건. 신동아 1991년 3월호, 월간중앙 1991년 3월호 참조. 멸정한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사실을 돈 나을만한곳에 친절하게 알려 「新快報」 봉투를 받는 수법이었고 그림이나 도자기에 글씨를 써주는 댓가로 관련업체에 보내 사례금을 받는 수법도 있다.

38) 대검찰청이 95년 5월 3일 발표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39) 이중 도박은 11명 간통은 5명 강제추행은 4명, 공갈 3명등 파렴치 행위자가 23명이나 됐다. 조선일보 1995년 5월 4일 참조.

40) 유인호, “장영자 사건”, 『현대한국을 뒤흔든 60대사건』, 신동아, 1988년 1월호 부록, pp. 294~297.

보통 때의 2배 수준인 40억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⁴¹⁾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
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연간 음성자금 조성규모가 1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⁴²⁾

이러한 음성자금은 정치적 관행과 정경유착, 官 주도적 정책과 규제의 남발 등으로 인해 조성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과 금융권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실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5월 李炯九 노동부장관이 수뢰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현직장관이 공직생활과 관련
된 부정으로 처벌받게 된 것은 자유당정권 이후 첫번째, 건국 이후 두번째라는 사실에 놀라움이
컸다. 이 사건은 李씨가 지난 1990년부터 4년동안의 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장기시설자금을 대출
해 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금융비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⁴³⁾ 또한 1995년 4월 奉
鍾顯 전 장기신용은행장이 덕산그룹에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채금으로 4천5백만원을 받아 구
속된 사건도 있다. 이와같이 금융비리는 대출과 관련된 사채비 명목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동
화은행비리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이 1991년, 1992년 李原
祚전의원 이용만 전재무장관·김종인 전 청와대경제수석에게 「은행장 연임이 가능하게 도와달
라」는 부탁을 하면서 뇌물을 주었다. 뇌물액수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단
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씨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조성한 비자금은 23억5000만원에
이른다. 실제 법정에서 안씨는 「이 비자금을 용도를 밝힐 수 없는 곳과 퇴직한 이북5도지사의 생
활보조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⁴⁴⁾ 그런데 이와관련 함승희 변호사는 「동화은행장 수사로 한국부
패의 총본산적인 엄청난 泌구좌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비자금의 경로를 추적해보니 정·관·재
계의 거물 수십명이 걸려 들었다」고 했다.⁴⁵⁾ 문민정부 들어 은행장 재임 때의 비위로 물러나거나
사법처리된 사람은 모두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계 비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⁴⁶⁾

대출부조리는 단순히 은행임원의 개인적 도덕성과 청렴도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부의 통화신용정책이 야기한 대출시장의 불균형에서 근본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1995년 5월에 밝혀진 제일은행장 사건도 政·經·金(은행) 간의 유착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제
일은행 李喆洙 前은행장은 거액의 대출커미션을 받고 천억여원을 '효산'이라는 회사에 대출해

41) 유영율,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 「신동아」, 1988년 6월호, pp. 387~388.

42) 조선일보, 1996년 6월 14일자 참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6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43) 서울신문, 1995년 5월 25일 참조.

적게는 몇백억원 많게는 조단위의 자금을 연 8 - 12.5% 수준에 5년이상의 장기로 빌려주기 때문에 장기설비자
금을 따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이자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정치참
여 이후 현대에 대한 제재조치중 산은 장기설비자금 대출중단이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었다고 한다.

44) 「6共비리 4대 의혹 풀릴까」, 중앙일보 1995년 10월 31일.

45) 「권력층 부패구조의 심장부를 도려내려고 했다가 좌절한 이야기」, 「월간조선」, 1995년 6월호. 함승희씨는 한
국사회의 구조적 비리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재벌과 정치권력과 유착관계에서 비롯된다면서 정치권력과 재
벌의 유착이 기본적인 부패구조라고 주장했다.

46) 서울신문, 1995년 5월 25일.

주었고, 이 가운데 ‘효산’ 張희장은 1993년 9월경 張學魯 前청와대 부속실장에게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고 3차례에 걸쳐 6천만원 가량을 뇌물로 주었다.⁴⁷⁾ 불법으로 거액의 금융자금을 대출해 주고 커미션을 받는 악습이라고 볼 수 있다.⁴⁸⁾ 은행장이 불법 대출에 관여하여 억대의 커미션을 챙기고, 여기에 또 청와대 비서관(장학로 사건)이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부패 커미션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밖에도 경제부패의 또 하나는 官과 經의 고질적인 유착구조에서 드러난다. 1996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 李모 국장과 鄭모 국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 되었다.⁴⁹⁾ 특히 정씨는 조선맥주라는 회사로부터 ‘지하 1백 50m에서 나오는 100% 천연 암반수로 만든 맥주’라는 등의 조선맥주 광고가 허위 비방광고라고 경쟁사로부터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6월에 발생한 증권 감독원 간부들의 기업체와의 먹이사슬은 기업과 官의 유착형태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와 增資를 희망했지만 증시 안정차원에서 주식공급물량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기업공개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증권 감독원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로비는 치열할 수 밖에 없었다.⁵⁰⁾

또한 1996년 6월에 재정경제원 한모 前국고국장도 업체로부터 ‘주식시장을 빨리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법처리 되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도 각종 금융부정이나 경제 관련 부패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부패는 그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깊어져 갔다. 흥미있는 것은 과거 큰 정치변동이 있을 때마다 최고통치권자들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주장하고 나왔다는 점이다. 5·16 이후의 제3공화국도 그러하였고,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제6공화국도 노태우 정권이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처럼 큰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 척결을 외쳤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⁵¹⁾

3. 言論腐敗의 實態

김영삼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제1의 과업으로 제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그 정도가 한계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실정이다. 정치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부패, 기업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경제부조리, 민원, 세무, 건설 등 행정관료들의 부정부패, 검찰, 경찰 등

47) 조선일보, 1996년 5월 1일, 5월 2일 참조.

48) 동아일보, 1996년 5월 2일 사설 참조.

49) 동아일보, 1996년 4월 18일, 조선일보, 1996년 4월 18일 참조.

50) 조선일보, 1996년 6월 4일, 6월 19일.

51) 김영중, 「부패학」, (서울 : 숭실대출판부, 1996), p. 155.

수사기관의 부조리, 대학교 입시부정과 초중등학교의 잡부금 시비와 같은 교육부조리,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전반에 구조화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⁵²⁾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윤리를 세우기 위해 대대적인 국민의식 개혁 작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개혁의 대상이면서 언론 스스로 자유롭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일반 대중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명분에 있다. 그러나 언론이 정치권력에 장악되어 권력의 대리인으로 기능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기자와 취재원간의 촌지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은 결코 그러한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⁵³⁾

개별 언론인들이 정부기관이나 기업 또는 특정집단이나 개인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음으로써 언론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촌지’라 불리는 금품의 수수는 이제 관행이 되다시피했고 한국언론의 치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1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기자협회의 전국기자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약 75%가 ‘촌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⁵⁴⁾ 또 언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언론인들 스스로 동료 언론인들이 ‘촌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3%에 이르고 있다.⁵⁵⁾ 이들 조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언론계에서 ‘촌지’를 받는 것이 거의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⁵⁶⁾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이 스스로의 恥部를 개혁하는데 힘써야 한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는 언론에 대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자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는 성경말씀까지 인용되며 “누가 누구를 단죄하느냐”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반발은 언론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개혁추진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⁵⁷⁾ 예컨대 기자와 취재원간의 촌지수수, 사이비 기자에 의한 민폐와 관폐, 협박과 공갈행태, 오보로 인한 인권침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 등 언론내부의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 자신이 최후의 개혁대상이 될 것은 명약관화 하다. 따라서 언론인들의 높은 직업정신을 구현시킬 장치의 마련이 관건이라 하겠다.

52) 양승목, “문민시대의 한국 언론 : 도덕사회건설을 위한 언론의 역할”,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 편, 1993, pp. 161~162.

53) 양승목, 상계논문, p. 167.

54) 「저널리즘」, 1990, p. 196.

55)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 1989년 11월호, p. 10.

56) 유재천 “언론인의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 제고 방안”,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편, 1993, p. 125.

57) 양승목, 전계논문, p. 173.

IV. 부패 방지를 위한 전략방안

1. 癥瘵 構造 根絶을 위한 戰略

일반적으로 신생국이나 개도국에서는 집정관식 정치가 행해지는데 경쟁자간에는 누가 집권하느냐만이 아니라 누가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Zero-Sum game 성격을 지닌 투쟁이 행해진다. 따라서 정치행태가 끊임없는 음모와 공작, 제후했다가 적대했다가 하는 식이며, 정치적 매장과 때로는 투옥, 살인에 이르는 정치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집정관제도에서 요구되는 충성과 신뢰는 보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자금의 확보를 위한 부정부패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집권층은 전문가보다는 자신의 지지자로 주위를 충원하며 일련의 망을 연결하는 집착체로서 부패한 자금을 이용한다.

관료부패현상의 가장 큰 진원지이며 또한 그 확산효과도 가장 큰 것은 정치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14일)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한국인 부패지수조사(전국성인 남녀 1천명대상을 96년 1월 3일에서 6일까지 실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5.4%가 정치권이 가장 부패했다고 응답, 공무원(7.4%)보다 10배가 넘었다. 정치인들은 선거자금 뿐 아니라 평소에 정당을 유지하고 각종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도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대부분의 현대국가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을 제정해 놓고 있으나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자금의 액수는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리하여 조달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결국 창구는 두말할 것없이 기업이다. 기업은 큰 이권이나 특혜를 기대하거나 그들의 이권이나 자산의 보호막으로 국회의원들과 끈끈한 연을 유지하게 된다. 과거 각종 경제의혹사건, 수서사건, 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 등이 대표적 케이스다.⁵⁸⁾ 패거리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라는 말은 권력층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계의 패거리를 돕고 뇌물을 받는 정경유착의 자본주의를 일컫는데 이 정경유착이 부패구조의 발원지인 것이다. 정치후진국의 고위관료직의 재량권은 확대되어 합법과 불법의 한계가 모호하며 관료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이권과 자원이 많다.⁵⁹⁾ 오늘의 부패상황은 정치인들과 관리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이에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 정경유착의 유산이라 볼 수 있다.⁶⁰⁾

58) 김해동 외,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1994, p. 45.

59) 尹泳五, 「부패는 민주주의를 망친다」, 신동아, 1991년 3월호, pp. 166~173.

60) 이 정복, 「신한국의 정태과제」, 한림과학원편, 도서출판 나남, 1993, p. 50. 조선일보 1995년 10월 29일자 사설에는 정경유착 폐해를 지적했다. 다음은 그내용 중 일부다. 물론 유착이나 비리라는 것이 오래 돈과 연결된 것이고 보면 이 사회의 '돈줄'인 기업계가 그에 연결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기업들이 이권을 찾고 혜택을 쫓아 돈으로 권력과 관료들을 부패시킴으로써 '숙명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우리 기업계는 그 숙명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하는가. 기업은 부패권력을 매도하고 권력은 부패기업을 악용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방지할 것인가

권력의 경제참여와 정경유착은 자원의 낭비,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충족, 분배의 왜곡⁶¹⁾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보장할 수가 없다.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 정치, 특혜 경제 하에서는⁶²⁾ ① 기업이 정상적 경영활동에 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업수익을 정당한 기업활동 부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② 시장경제의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는 긴급한 재화의 생산을 하지 않고 정치적 필요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으며 ③ 소비자 선호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활동은 자칫하면 소비자에게는 불요불급한 상품을 생산하여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④ 그 결과로 분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에 의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료 등의 음성수입과 같이 불로 소득(unearned income)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분배는 필연적으로 왜곡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특혜 또는 유착이 아무리 합병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경유착이 정치집단과 경제력을 장악한 자본가 계급의 이해의 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위와같은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일반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⁶³⁾ 따라서 정경유착은 이와같이 계층간 만족도의 격차를 야기하여 사회적 불안의 한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경 두 집단의 존립기반도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서도 소망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경유착이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엘리트와 경제 엘리트간의 야합이라는 이러한 조직적 부패확산(spillover effect)의 결과는 政·經·官·言 등의 먹이사슬적 부패현상을 낳게 된다.⁶⁴⁾ 정경유착의 대형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5공화국의 경우 범양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약 1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며 이 사건은 특혜경제와 정경유착에 의한 행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⁵⁾

과거 30여년 동안 독재권력과 일부 재벌기업들은 특혜와 비자금을 주고 받는 정경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 정권과 이권유지의 기반으로 이용하였다. 이들은 힘의 논리로 국민경제를 유린하고 사이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지배집단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기반인 각종 산업과 국책사업을 전유물로 만들고 대규모 부정축재를 했다. 국부는 특권 부유층에 부당하게 집중되고 막상 나라의 주인인 일반국민들은 부당한 지배를 받으며 피해계층이 된 것이다. 위에서 보아 온 이 정경유착이나 官經 유착이라는 부패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의 삼각동맹은 이익집단의 이익투입과 로비라는 정치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61) 이종원, “부패의 경제”, 성대, 한국산업연구소, 「한국경제」, 14권, 1987년 1월, pp. 102~114.

62) 전철환, “정경유착과 민주화의 과제”, 「계간 경향」, 봄호, 1988, pp. 137~138.

63) 정치 행정권력 장악집단과 경제력 장악집단간의 게임은 ‘非零化 2인 협력게임’에 해당하지만 이들 집단과 국민간의 게임은 ‘비협력 2인 零和 게임(zero-sum two non-cooperative game)’에 해당하여 정치 및 경제력 장악집단의 이익은 국민의 손실로 보상된다고 전철환교수는 설명한다.

64) 김영종, 전게서, p. 260.

65) 김영종, 전게서, p. 285.

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 행정환경과 이의 내부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돈을 중심으로 흘러온 선거형태를 비롯한 각종 정치과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련 법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그러기 때문에 문민정부에서는 정치 통합법이라는 개혁입법을 하여 정치자금의 사용을 줄이고 국고보조금을 대폭 증액시키는 大改革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개혁조치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험을 보는 듯 했으나 날이 갈수록 그 효험이 줄어드는 것 같다. 당초의 정치풍토 대개혁의 시도가 여의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이왕의 이 정치개혁법을 여·야가 보완하면서 정치풍토를 쇄신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패일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일에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행정정보공개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행정과정도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⁶⁶⁾ 나아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특성인 관치경제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조세, 금융, 인허가 등 경제의 모든 면에서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치경제 아래서 기업이 특혜를 받은 대가로 권력자에게 검은 돈을 헌납하는 정경유착의 구조가 권력형부패의 온상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관치 경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권력형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라고 할 수 있다.⁶⁷⁾ 이를 위해서는 첫번째로,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금융을 자율화 하여야 한다. 정책금융의 축소, 금리의 자유화,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서 금융부문의 자율화를 확대하여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⁶⁸⁾ 두 번째로는 금융실명제의 철저한 실시다. 다소의 부작용은 있지만 참고 관찰시켜 나가야 한다. 세 번째 방안으로서 재벌의 개혁이 있다. 재벌총수인 오너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재벌의 소유구조는 결국 국 오너의 경영전권집행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또 이를 마음대로 유출해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 대기업과는 판이한 이러한 총수 1인 지배체제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거래감시 강화와 외부이사제도, 社外감사제, 소액주주 대표소송제 의 도입으로 오너의 경영전권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⁶⁹⁾

2. 言論의 腐敗統制 戰略

세계의 권위있는 언론들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거침없이 추적보도한다.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이나 온정적 현실론에 타협하지 않고 최고책임자에게 최대의 책임을 추궁한다. 투명한 진실이 어설픈 糊塗보다 사회와 국가에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66) 김해동 외 공저, 전계서, p. 239.

67) 중앙일보, 1995년 1월 26일.

68) 경향신문, 1995년 5월 27일.

69) 조선일보, 1995년 11월 17일 사설참조

일본에서 언론의 비리보도로 물러난 총리는 戰後에만 다나카, 다케시타, 우노, 호소카와 등 4명이나 된다. 일본정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다나카가 록히드사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비리를 처음 폭로한 것은 76년초 다치하나라는 자유기고가였으며 한 달 후 요미우리신문은 뇌물사실을 폭로 다나카가 체포됐다. 닉슨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워터게이트 사건도 워싱턴 포스트지의 3년에 걸친 추적보도가 아니었으면 단순한 절도사건으로 종료됐을 것이다. 미국언론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를 몇 년이고 몰고 늘어져 심층추적보도를 계속해 공직에서 쫓아내고 있다. 87년초 하원의장에 취임한 짐 라이트는 취임초부터 책값의 55%를 인세로 챙기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라이트는 2년에 걸친 추적보도에 물리다 마침내 89년 5월말 물러났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티엠포지가 보도한 구동독 해군함정 도입비리, 스페인 엘문도지가 터트린 보안경찰의 무고한 시민 살해사실, 클라스 나토사무총장의 경제장관 시절 군용헬기 체결 과정 뇌물수수 사실을 파헤친 벨기에 언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언론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⁷⁰⁾

언론은 행정부의 운영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며 정책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감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부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권위주의화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부패통제 방안으로서 언론의 역할과 통제기능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⁷¹⁾

1) 언론의 부패 통제기능

현대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영역에서 점차 門外漢으로 저락해 가는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냉철한 머리가 되어 정부나 사회에 대한 감시자, 비판자가 되길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⁷²⁾ 언론은 본래 환경을 감시하고 환경 속의 제요소들간의 관계를 밝히며 문제의 대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화를 전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의 이익과 권리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사명을 지닌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는 공공의 관심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정부의 활동은 언론의 주요 표적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언론의 기능 역시 정부의 권력남용과 오용을 감시, 고발하며 행정관료들의 부정과 부패, 과오와 실정을 비판하는 일에 중점을 두게 된다.

현대 언론은 그것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도 특히 행정부의 제반 정책, 계획, 관리 등에

70) 중앙일보, 1995년 11월 24일

71) 徐正宇(1988), “언론과 관료제”, 「계간 경향」, 봄호, p. 93.

72) 유재천, 「한국언론와 언론문화」, (서울 : 나남, 1988), pp. 107~109.

관한 목적, 내용, 수단,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상세하게 보도하고 해설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비판과 시정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나 거부 혹은 지지나 찬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해서는 유력한 민주통제의 장치가 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정치 사회의 교육적 메카니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이 행정에 대한 오류를 진단, 파악하고 그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언론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⁷³⁾

2) 언론의 역할 및 과제

(1) 환경감시활동의 강화

무엇보다도 언론은 Watchdog으로서 환경감시기능(surveillance function)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 전부분의 각종 현상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사회 전부분의 각종 현상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현상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모든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사실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탐사언론(investigative journalism)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이런 정신하에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한 감시의 눈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회유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⁷⁴⁾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환경감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인의 전문화의 고양이다. 전문화란 ‘한 직업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그 특성들을 수정해 나가는 動態的 과정’으로 정의된다.⁷⁵⁾

전문직은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이론에 기초한 기술의 활용, 윤리강령과 윤리기구의 설립을 통해서 이타 정신과 사회봉사정신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직업을 의미한다.⁷⁶⁾

둘째, 언론이 행정부에 대하여 책임있는 환경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정보 관리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정보관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무장된 大記者에게 맡겨져야 한다.⁷⁷⁾ 평생 직업의식과 고도로 훈련된 대기자들이 부정 부패사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73) 최봉기, “행정오류의 진단과 시정에 관한 언론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제24권 1호, 1990년, p. 350.

74) 양승목, “문민시대의 한국언론”,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편, 1993, pp. 169~170.

75) Howard M. Vollmer and Donald L. Mills(eds), Professionaliza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 Hall, 1966, pp. vii~viii.

76) 서정우, “언론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연세행정논총」, 제10집, pp. 243~245.

77) 서정우, “언론과 관료제 -언론의 기능을 중심으로-”, 「계간 경향」, 1988년 봄호, 경향신문사, p. 95.

셋째, 언론이 행정관료를 감시함에 있어서 나무만 보지 말고 산을 볼 수 있도록 사실보도와 더불어 사실의 의무나 진실까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건의 결과보다는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함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의 흥미보다는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부패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 보도하고 새로운 처방과 반부패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⁷⁸⁾

(2) 보도의 공정성

한국언론이 정부로부터 또는 언론경영층이나 각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정한 보도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올바로 충족시키려면 편집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편집권 독립은 보도의 중립성과 기본질서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⁷⁹⁾

특히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와 행정예의 권한 집중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권의 남용과 오용, 관료의 부정과 부패는 물론 행정의 성과나 공적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구조적 부패실태와 방지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왔다. 부패 유착현상이 구조적이고 관행처럼 굳어져 광범위하게 이 사회에 퍼져 있었다. 한마디로 각종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政·官·經 유착체제였으며, 군부와 언론도 시대가 처한 사회분위기와 함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규제완화를통해 행정의 간섭이나 규제 과잉보호등을 과감히 혁파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정책의 투명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패통제 방안으로서 언론의 감시기능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언론이 독재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감시한다면 우리나라의 부패도 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부패 현상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은 괴물(monster)적 존재이며 국민의 고통을 탐닉하는 중대범죄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정확한 실체를 먼저 규명하고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지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 이반이다” 또한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고 덕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기둥인 공직사회가 오염되고 흔들리면 그 사회는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

우리사회의 구조화된 유착적 부정과 부패의 견고한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78) 서정우, 상계서, p. 95.

79) 원우현, “한국언론과 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 한국행정학회편, 1988, p. 522.

민의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식개혁 없이는 부패척결은 일과성이 될 것이며 의식 개혁이나 뇌물관행을 추방하지 않고서는 부패척결은 요원하다.

결국 유착부패를 근절하겠다는 통치권자의 확고부동한 개혁의지, 과감한 규제완화, 언론의 감시역할, 검찰과 감사원의 사정기능이 우리사회의 부패고리를 혁파하는 올바른 방도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및 논문

1) 국내서적

- 경향신문사간(1988), 「한국의 관료제 연구」 봄호, 서울 : 경향신문사
 김 영(1982), 「당인」, 서울 : 백미사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해동의(1994), 「관료부패와 통제」, 서울 : 집문당
 방정배(1991), 한국언론개혁론, 서울 : 나남
 안병만(1989) 한국정부론, 서울 : 다산출판사
 유재천(1988),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서울 : 나남
 조선일보 경제부(1983), 「재벌 25시」, 서울 : 동광출판사
 주삼환역, 핫치킨슨저(1990), 「행정철학」, 서울 : 법문사
 한림과학원(1993), 신한국의 정책과제, 서울 : 나남

2) 국내논문

- 박종철(1987), “한국의 산업화 정책과 국가의 역할, 1948~1972 : 공화국과 3공화국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광식(1993), “언론정책분과 논문에 대한 논평”,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편
 오경환(1984), “떡 만지면 떡고물 묻는 법 : 부정부패 30년의 전례적”, 「정경문화」, 9월호
 유재천(1993), “언론인의 전문성 함양과 직업윤리 제고방안”,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편
 유근일(1988) 민주화와 공공행정 언론관계 “민주사회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 고시원
 원우현(1988) “한국언론과 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사회성숙을 위한 공공행정, 고시원
 유영을(1988),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 「신동아」, 6월호
 유인호(1988), “장영자 사건”, 「신동아」, 1월호
 유일상(1987), “언론기능의 역동성”, 「사상과 경향」, 겨울호
 이민웅(1993), “정부와 언론의 관계”, 「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편

- 이상우(1984), “돈과 정치”, 「월간 조선」, 8월호
- 이정복(1993), “신한국건설을 위한 제도개혁과 통치이념”,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편
- 이준일(1989),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 「한국정치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편
- 양승목(1993), “문민시대의 한국언론 : 도덕사회건설을 위한 언론의 역할”, 「신한국의 정책과제」, 한림과학원편
- 서정우(1988), “언론과 관료제”, 「계간경향」, 봄호
- 전종섭(1988), “전문가 역할과 윤리적 책임”, 「한국민주행정론」, 고시원
- 전철환(1988), “정경유착과 민주화의 과제”, 「계간경향」 봄호
- 정용길(1980), “새정치 방식과 정치비용”, 「정경문화」, 188호
- 최봉기(1990), “행정오류의 진단과 시정에 관한 언론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제24권 1호
- 한용원(1989), “한국정치에 있어서 군의 역할”, 「한국정치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편
- 함승희(1995), “권력층 부패구조의 심장부를 도려내려고 했다가 좌절한 이야기”, 월간조선, 6월호

3) 기타자료 및 일간지

경향신문, 1995년 5월27일

동아일보, 1996년 4월 18일자, 5월 2일자, 10월 27일자, 10월 28일자,

서울신문, 5월 25일자

조선일보, 1995년 5월4일자, 10월29일, 10월30일, 11월7자, 1996년 2월 25일자, 4월 18일자, 5월1일자, 5월 2일자, 6월 4일자, 6월 14일자, 6월 19일자, 7월 24일자

중앙일보, 1995년 1월 26일자, 10월 31일자, 11월 24일자

〈잡지〉

신동아, 1991년 3월호 월간조선, 1988년 5월호 월간조선, 1995년 6월호 월간중앙, 1991년 3월호, 「현대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신동아, 1988년 1월호 부록

신문과방송, 1989년 11월호. 저널리즘, 1991년 겨울호